

濟州島研究 제15집(1998), pp.41~54

<특집: 제주학의 과제와 방법Ⅱ>

제주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인문학적 측면에서

- 제주근현대사 연구를 중심으로 -

박 찬 식*

I. 머리말 - 제주학, 제주사, 그리고 제주근현대사

‘제주학’이라는 학문 범주의 적합성 및 그 연구 성과는 최근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검토되어 왔다(장주근 1984; 유철인 1996; 전경수 1997; 현길언 1997). 그 중에서도 인문학의 경우, 문학(구비문학, 현대문학; 무속 본풀이, 민요, 설화, 현대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한 제주학 연구 방법론이 모색된 바 있다(현길언 1997).

그러나 제주학의 중요한 범주 가운데 하나인 제주 역사에 대한 연구 방법론은 지금까지 깊게 모색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우선 역사학계의 중앙 위주의 역사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사관과 해석을 도외시하는 실증사학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데다가, 연구 여건의 열악함, 즉 연구인력과 연구성과의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역사학은 과거의 인간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하면서도 현재의 입장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한국의 역사학은 아직도 실증사학과 중앙 위주의 역사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사, 생활사, 문화사에 대한 관심 증대, 세계화·지방화의 추세와 지방자치의 실현 등 학문 내외적인 조건의 변화 속에 지방사 연구가 활성화되고

* 제주대학교 사학과 강사

있다.

섬이라는 지리적 독립체인 제주의 역사는 중앙과의 연관성 못지 않게 나름대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제주사 연구는 한국 지방사 연구의 중요한 시험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때문인지 몰라도 제주사 연구는 타지역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수행되어 왔다. 1970년대까지는 주로 향토사학자 중심의 개별적, 초보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주대학교 사학과가 창설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제주사는 향토사의 범주에서 벗어나 전체 한국사의 일부로 연구되었고, 연구의 시각이 확대되고 연구방법론도 새롭게 적용되었다. 1990년대는 제주사 연구의 정착기라고 볼 수 있는 시기이다. 제주도사연구회의 창립, 제주사료탐독회의 활동, 제주대 박물관의 지속적인 고고학적 조사 발굴, 자치단체 및 민간의 지역사에 대한 관심 증대로 제주사 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제주사 과목이 제주대 사학과와 교과과정에 편입됨으로써, 제주사를 독립된 학문 분과로 만들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되었다.

제주사 연구에 대한 회고와 전망은 과거 몇 차례 이루어졌다(김종업, 권인혁, 고창석, 김용완 1981; 김종업·김동전, 이청규, 고창석, 권인혁, 박찬식 1991; 강만생 1996). 이러한 제주사 연구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우선 연구 대상 시대와 분야면에서 공백이 상당히 많다. 특히 근현대사 부분의 연구는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본 자료의 정리가 미흡하다. 관찬 자료(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등)·규장각 소장 자료 등의 추출·정리·영인·번역 등의 작업이 아직도 극히 저조하다. 셋째,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서술된 제주 통사가 아직도 없다. 때문에 제주사 연구 성과가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넷째, 제주사를 보편성과 특수성의 측면에서 통일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과, 연구 방법론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마을별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실제 주민의 삶과 떨어진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 문제점 가운데서도 제주근현대사 연구의 취약함은 전체 제주사를 구성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근현대사는 한국사의 전개

과정과 맞물려 있으면서도 상대적 특수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방성칠란’, ‘이재수란’과 같은 외래종교와 연관된 독특한 민란의 연속, 해녀들의 섬 밖으로의 출가·항일투쟁, 도민들의 일본으로 대거 진출, 미·일의 제주도 전략기지화, 4·3사건, 70년대 이후 급속한 감귤·관광산업의 성장 등 연구 주제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역사학적 접근은 매우 일천한 상태이다. 물론 일부 사회학·인류학·민속학·경제학 등의 선행 연구와 저널리즘적 접근이 있으나, 역사학적 고찰이 진지하게 수행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근현대사는 역사학만이 아니라 사회학·인류학·경제학·정치학 등 제반 학문의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근현대사는 현재와 직결되는 동시대이기 때문에, 문헌에 근거하여 역사적 상황과 변화 과정을 주로 다루는 역사학 방법론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여 제주근현대사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평소 생각하였던 연구 과제와 전망을 간단히 밝혀보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제주사 연구가 이루어진 1980년대 이후의 연구 성과에 한정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또한 제주 역사의 자체적인 시대구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상 일반적인 한국사의 시대구분 방식을 원용하여 1876년 개항을 근대의 기점으로 삼고, 1945년 해방을 현대의 기점으로 삼았음을 밝혀둔다.

II. 연구의 성과

1. 근대(1876~1945년)

제주근대사 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80년대 후반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민란(‘방성칠란’, ‘이재수란’)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외에도 제주도민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일본의 어업침탈사를 다룬 연구가 나왔고, 근대교육사, 유배인 등에 대한 단

편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편 식민지시대사 연구는 이때까지만 하여도 전무한 실정이었다(조성운 1989; 박찬식 1991).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주근대사의 연구 주제가 다양해지고 기왕에 연구되었던 주제는 더욱 깊게 연구되었다. 민란 연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시각과 자료에 입각하여 ‘이재수란’을 새로이 연구한 성과가 나왔다(박찬식 1996; 1998). 이 시기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새로운 자료의 입수에 따른 항일운동사 연구의 개척이라고 할 수 있다(제주도 1996). 이 연구는 정부 기록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던 항일운동 관련 사건 판결문과 일제측 자료, 『동아일보』·『조선일보』 등에 나와 있는 사건 관련 기사 등을 총집결시킨 가운데 수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관련 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전국에서는 최초로 사회주의운동을 포괄한 지방 차원의 항일운동사를 편찬함으로써, 한국지방사 연구의 모범적인 사례를 남겼다고 평할 수 있다. 이러한 항일운동사 연구는 1997년 ‘제주항일기념관’ 건립에 학술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역사 인식 제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는 일제하 사회경제사 연구가 시도되기도 하였다. 일제하 제주도의 인구 변동에 대한 연구(이영훈 1991)로 시작된 사회경제사 연구는 농업경영구조, 농업생산력, 도민의 생활상 등에 연구(진관훈 1997)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식민지시대 민간에 유행했던 찬물교를 중심으로 신흥종교에 대한 최초의 연구도 수행되었다(조성운 1992).

2. 현대(1945년 이후) - 4·3을 중심으로 -

제주현대사 분야는 역사학적 접근이 거의 없었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사는 다루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 부분은 사회과학의 몫으로 치부하여 왔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현대사 연구가 역사학계에서 금기시되어 후학들의 연구를 제한하기도 하였다(서중석 1996).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제주현대사 연구가 미진하다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중에도 다행스럽게 제주 4·3을 중심으로 한 해방 5년사 연구는 4·3 문제의 해결이라는 당위적 과제와 더불어 진행되

었다.

제주현대사에서 4·3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하다. 4·3은 역사적 사건 이면서도 아직도 제주인의 심성을 지배하고 있는 동시대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4·3에 대해서는 냉전체제하 군사독재정권시대에는 학술적 연구조차 금기시하여 오다가 80년대 후반 이후 연구가 활성화되었다(고창훈 1989; 박찬식 1993; 김창후 1995; 양정심 1998).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에는 사회 민주화운동의 전개에 따라 정치사회운동과 연계시켜 4·3을 이해하려는 분위기가 대두하였다. 이 시기 연구는 주로 정치학자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민중항쟁론이 부각되었다. 전 시기까지의 무장폭동론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된 민중항쟁론에 입각한 연구들은 4·3을 제주민의 시각에서 보고자하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 왔고, 4·3의 성격을 방어적 평화투쟁으로 인식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학술 연구와 더불어 제주 4·3연구소와 제주신문 4·3취재반 등의 현장 증언 채록 활동이 개시됨으로써 진상 규명을 위한 토대가 형성되어 갔다.

90년대 중후반에 와서 4·3 연구를 저해하였던 학문외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진실에 더욱 다가가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이 시기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와해와 제주도 내에서의 합동위령제의 개최 등 화합 분위기는 4·3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 시기 연구의 특징은 사건 당시의 상황에서 4·3의 진실을 규명하자는 역사주의적 관점이 증시되면서, 전 시기의 민중항쟁론이 유보되고 양민학살에 초점이 두어졌다는 점이다. 제민일보 4·3취재반의 꾸준한 취재 활동(제민일보 4·3취재반 1994~1998)과 4·3연구소, 도의회 특별조사반의 마을별 조사 활동을 통하여 학살의 실상과 피해실태 등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

특히 4·3 발발 50주년을 맞이한 1998년에 치러진 학술문화사업 중에서 잃어버린 마을 조사 사업(제주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1998), 학술심포지엄과 『제주4·3연구』라는 기념논문집의 출간(서중석 외 1999) 등은 지금까지의 4·3 연구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할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국제학술대회, 국민회의 4·3진상조사위원회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4·3 연구 분위기가 고조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할 만하다.

한편 4·3 연구를 제외하면 제주현대사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사회학 연구자들에 의하여 50년대 이후 제주사회의 변동, 개발과 도민의 대응, 지역주민운동, 각종 선거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주목할 만하다(신행철 외 1995; 1998). 또한 각종 지역신문이나 잡지 등에 연재된 저널리즘 시각의 기획시리즈, 제주도에서 간행한 『제주실록』 등도 참고되지만, 본격적인 연구 성과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Ⅲ. 연구의 과제

1. 근대(1876~1945년)

지금까지의 제주근대사 연구는 민란과 항일운동 연구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주요사건 위주의 연구로써는 전근대 제주사회의 근대로의 이행, 제주사회의 여러 인간집단의 생활, 심성, 권력관계 등을 이해하는 데 큰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연구 주제의 다양화가 절실하게 요망된다 하겠다. 구명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한말 제주도를 둘러싼 외세 열강들의 역학관계 ② 제주사회 내부의 권력관계, 외세에 대한 인식 및 대응 ③ 한말 외세의 침탈사, 식민지시기 일제 침탈사에 대한 체계적 정리 ④ 지방행정의 변천과 도민의 대응 ⑤ 사회 신분제의 해체 과정과 사회 변동에 대한 도민의 인식과 대응 ⑥ 산업 경제사(농업, 토지소유관계, 수산업, 해녀어업, 목축업, 공장업, 임업, 상업, 교역업 등) ⑦ 재일제주민의 실태 ⑧ 마을별 분쟁 사례 ⑨ 외래 종교의 포교에 따른 문화적 갈등 및 수용 등

다음으로는 분산된 자료의 수집과 정리 작업이 시급한 점을 들 수 있겠다. 한말 제주도를 둘러싼 외세 열강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국 외교문서 및 서양인들이 남긴 제주 관련 자료에 대한 탐색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제치하의 제주도 실정을 파악하는 데 일제측의 각종 통계자료 및 제주도 조사보고서 등은 1차 기본자료라 할 수 있다. 우선 관보 및 총독

부 발간 기관지에 대한 정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기록 보존소에 소장된 재판기록, 범죄인명부, 마을별 실태조사서 등 행정 관련 자료와 관공서(면·리사무소 등)에 보관되어 있는 미폐기 문서 등을 하루 바삐 입수,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외에도 일본인이 제주 농업·수산업·목축업 등의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는 제주민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각 마을·가문별 보관 문서는 당시 향촌사회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다. 또한 증언 채록은 문헌을 통해 파악되지 않는 당시 제주민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근대사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식틀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 역사에서 전통시대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근거, 즉 근대화의 지표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근대사를 전체 한국사의 발전양식에 비추어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제주근대사를 내재적 발전과 한반도와 일본으로부터의 외부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현대(1945년 이후) - 4·3을 중심으로 -

제주현대사 연구는 4·3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 연구의 문제점 및 과제는 산적하여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기존에 공개된 자료의 정리와 더불어 미공개 자료 소재의 추적, 공개 요구 등 학문외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일 것이다. 당시 미국 정부의 점령지 정책이나 현지 미군정의 구체적 작전 계획 및 실태에 관련된 문건 및 자료가 지금까지 전혀 공개되지 않아 왔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지금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연구 수준은 4·3 피해에 관한 현지 증언과 미국의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된 극소수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적인 실상만 정리해 놓은 정도이다.

앞으로 조사해야 할 대상 자료를 미국측과 한국측 자료로 나누어 정리하여 보자. 우선 미국측 자료로는 미국 정부 수준의 자료, 극동사령부 및 한국

주둔 미군정 수준의 자료, 제주 현지 미군정 수준의 자료로 구분하여 미국측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조사하고, 미국 정부에 외교적인 채널을 통하여 공개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무성, 국방성, 국가안전보장회의,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워싱턴 국립기록센터(WNRC) 등 관계 기관에 소장된 자료 탐색을 먼저 거쳐야 할 것이다. 한편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워싱턴 국립기록센터(WNRC) 등에 소장된 주한 미군정 관련 문서들 중 상당수는 국내의 각 기관들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입수하여 있거나, 일부는 영인 출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탐색 작업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정병준 1994).

다음으로는 한국측 자료에 대한 검색 작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료 작성 시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과 이후로, 자료 작성 주체는 중앙 정부와 제주 현지의 수준으로 나누어 자료를 찾아야 할 것이다. 국방부, 내무부, 경찰청, 검찰청, 정부기록보존소(총무처), 제주도청, 국방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제주검찰청, 제주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작업과 자료 협조를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현재 잠정 확인된 4·3 관련 미공개 자료와 소장처를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4·3 관련자 재판 기록: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 ② 4·3 관련자 수형인 명부: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 ③ 4·3 관련자 심문 조서: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제주경찰청
- ④ 4·3 피해자 실태 조사: 제주경찰청
- ⑤ 4·3 토벌 일지: 제주경찰청
- ⑥ 4·3 토벌 담당 국방경비대 관련 자료: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 ⑦ 4·3 관련자 연좌제 적용 자료: 제주경찰청

이러한 상부기관의 소장 자료에 대한 수집 정리와 더불어 현지 제주민들의 4·3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살피기 위하여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관련자들의 증언 채록을 통한 구술 자료의 확보와 증언 자료집 출간, 정리 분석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3 체험세대가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타계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증언 채록

작업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다른 작업에 비하여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4·3 연구의 방법론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치학자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4·3의 실상에 미시적으로 접근하면서 전체상을 복원하여야 할 것이다. 즉, 아직도 당시의 상황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주의적 접근 방식이 유효하다고 보여진다. 4·3에 대한 사실 파악조차도 미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 앞서나가면 4·3 연구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제민일보의 「4·3은 말한다」 시리즈는 저널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증 차원의 4·3 연구의 선구적 성과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제민일보 4·3취재반 1994~1998). 앞으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마을별 4·3 조사의 방법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식민지시대 이래의 정치·행정·경제(토지소유관계)·사회관계 등을 해방 직후 상황, 4·3 전개과정, 4·3 이후의 사회변동 등과 연결시켜 연구하여 봄으로써, 4·3을 분수령으로 한 제주근현대사의 구체적인 상을 도출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4·3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접근 방식에서 탈피하여 구조적 시각, 민족통일론적 시각, 제주민의 자발적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러한 자료 확보와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4·3 연구는 각 부문 별로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4·3을 둘러싼 국제정세, 특히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4·3을 전후한 국내정치세력의 동향과 남로당의 전략 속에서의 제주의 위치, 남로당 제주도당의 위상과 중앙당과의 연계, 당시 제주민들의 생활상, 무장대 지도부의 구성·노선 등이 4·3의 원인과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량 양민학살에 대한 총체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살의 배경, 전모, 유형 분석 등의 기초작업을 거쳐서, 자연촌(洞)을 기본단위로 하여 마을별 사례 검토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외국·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냉전시대 양민학살 사례와 비교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서 4·3의 보편성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민학살과 연관해서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토벌대 및 우익세력

(경비대, 경찰,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 제주도의 토착우익세력, 민보단 등)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4·3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제주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현재적 사건이기 때문에, 4·3을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데 그치지 말고, 4·3이 미친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영향에 대한 분석도 제주현대사를 연구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4·3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마을에 대한 실태 조사, 마을별 피해 실태 조사, 토지 소유의 변동 상황, 인구 변동 등에 대한 조사와 아울러 집단 기억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제주현대사 연구는 4·3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전체적으로 볼 때 4·3 연구의 수준도 초보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주현대사 연구는 전혀 개척되지 못한 상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현대사 연구는 4·3 연구를 넘어서서 현대의 각 시기가 본격적으로 연구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1950년대와 1960년대 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일부 사회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개발사, 산업변천사, 토지투기문제, 사회운동사 등에 대한 역사학 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현대사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개발 과정이 역사학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역사학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 도민들이 겪어왔던 경험과 의식의 실상과 변천일 것이다.

IV. 맺음말 - 연구의 전망

이상에서 제주근현대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연구방법론, 자료, 연구 여건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앞으로의 연구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글을 맺고자 한다.

우선 연구방법론의 측면에서 제주근현대사는 물론 전체 제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왔다. 제주 역사 연구는 지금까지 너무 중앙사의 일부로만 여겨왔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제주도만의 역

사로 이해하여 보편성을 상실하고 특수한 역사로만 기술하는 것도 문제이다. 즉, 전체사와 지역사의 통일된 관점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최근 지방사 연구의 활성화에 따라서 새로운 제주 역사 인식들이 잡혀나가기라고 기대된다. 이러한 통일된 관점을 정립한 뒤 새로운 제주통사가 서술되어야 할 것이고, 연구가 취약한 근현대사의 공백이 매워져야 제주통사 편찬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제주근현대사 연구에 인접학문과의 연관성이 매우 취약하였는데, 앞으로의 연구는 이러한 폐쇄성을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근현대사 연구에 학제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은 기본적으로 기초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여 시대 전체의 성격이나 흐름을 알기가 어렵고 사실 파악에서도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제주근현대사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실증적인 연구 토대 위에 정치학·사회학·경제학·인류학 등의 방법론을 수용하였을 때 새롭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 자료의 측면에서는 1차 문헌자료의 발굴과 정리 작업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각국 외교문서, 일제측 통계자료,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자료, 관공서(면·리사무소) 소장 미폐기 문서, 제주산업 실태 조사보고서, 각 마을·가문별 보관 문서 등에 대한 체계적인 확인 작업과 아울러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시급히 근현대사 서술을 위한 체계적인 마을별, 사안별 증언 채록 자료의 확보·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4·3 연구의 경우, 미공개 자료의 조사와 학문외적인 공개 요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제주근현대사 관련 사료의 분산, 소실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들 관련 자료는 여러 곳에 무수히 흩어져 있으나, 전혀 수집 정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각 관공서의 자료들도 한 곳에 보관되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폐기처분되고 있다. 예컨대 제주도청 내에 행정자료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전혀 데이터 뱅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근현대 사료 수집 정리 편찬을 위한 기구의 설립이 절실히 요망된다 하겠다. 국가 자료를 법제적으로 잘 보존하고 있는 국회도서관, 정부기록보존소 등과 같이, 가령 도의회 공간을 활용하여 도민을 위한 사료관, '제주도기록보존소'를 세울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연구 여건의 조성과 관련하여 먼저 현재 연구인력의 절대 부

족과 분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팀워크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주근현대사 연구 모임', '4·3 연구팀' 등을 구성하여 연구와 현장조사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기관의 부실함을 지적할 수 있다.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제주도사연구회 등이 활동하고 있으나, 근현대 연구의 전문성은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제주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실용화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이 대학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공성을 띤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4·3 연구의 경우, 그나마 유일한 조사기구인 도의회 4·3 조사팀도 현재 별반 조사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3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줄 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자체적인 조사 연구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전문 조사연구팀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이웃한 일본의 오키나와 현청에는 현지사 직속으로 오키나와전투 희생자 문제를 다루는 기구가 구성되어 있고, 광주시청에는 5·18전문위원실이 설치되어 전문인력이 활발한 조사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근현대사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손을 대지 않은 미개척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분야 연구자들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가겠다는 자세로 시세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객관성과 내적 충실함을 견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만생

1996 “제주인문과학의 연구와 과제”, 『제주지방학의 연구와 발전방안』(’96 제주방송인클럽 학술세미나).

고창훈

1989 “4·3민중운동을 보는 시각과 과제”, 『실천문학』 봄호

김종업, 권인혁, 고창석, 김용완

1983 “해방후 제주연구 개관(Ⅱ): 역사 고고 분야”, 『탐라문화』 2.

김종업·김동진, 이청규, 고창석, 권인혁, 박찬식

1991 “회고와 전망(1980년대)”, 『제주도사연구』 1.

김창후

1995 “4·3 연구의 현황과 과제”, 『광복 50년과 제주』(제주도연구회 제11차 전국학술대회).

박찬식

1993 “4·3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주문학』 24.

1996 “한말 제주지역의 천주교회와 ‘제주교안’”, 『한국근현대사연구』 4.

1998 “한말 천주교회의 제주교안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9.

서중석

1996 “1980년대 이후 진보적 연구자들의 남한현대사 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 역사비평사.

서중석 외

1999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신행철 외

1995 『제주사회론』, 한울아카데미.

1998 『제주사회론』 2, 한울아카데미.

양정심

1998 “제주4·3항쟁에 대한 연구동향”, 『역사와 현실』 27.

유철인

1996 “제주학으로서의 제주사회문화 연구”, 『제주지방학의 연구와 발전방

안』(‘96제주방송인클럽 학술세미나).

1996 “지역연구와 제주학”, 『제주도연구』 13.

이영훈

1991 “일제하 제주도의 인구변동에 관한 연구”, 『제주항쟁』 1.

장주근

1984 “지역연구의 표본사회로서의 제주도”, 『제주도연구』 1.

진경수

1997 “제주학, 왜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도연구』 14.

정병준

1994 “미국내 한국현대사 관련자료의 현황과 이용법”, 『역사와 현실』 14.

제민일보 4·3취재반

1994~1998 『4·3은 말한다』 1~5권, 전예원.

제주도

1996 『제주항일독립운동사』.

제주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1998 『제주4·3유적지 기행 -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조성윤

1995 “제주도 근대사회운동의 재조명”, 『한라산』 29, 제주대 총학생회.

1989 “제주도 근대사회운동의 재조명”, 『제주사회론』, 한울아카데미.

1998 “찬물교 연구서설”,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35, 1992; 『제주사회론』 2, 한울아카데미.

진관훈

1997 “1930년대 제주도 농촌의 농가경영구조에 관한 연구”, 『제주도사연구』 6.

1997 “1930년대 제주도 농업생산력 변동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18.

현길언

1997 “제주학 연구 방법론, 문학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14.